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道 산림엑스포 사후 활용안 마련 시급"	1
강원도민일보	02면	"의료대란 속 강원지역 의료원 적자 도비 지원해야"	2
강원도민일보	02면	본지 기사 등장한 도정질의	3
에너지경제	온라인	강원도의회, 24일 제3차 도정질문 이어가	4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 '다문화연구회' 간담회	5
江原日報	02면	강원도의회 "다문화 친화적 사회 조성 앞장"	5
에너지경제	온라인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연간활동 방안 논의	6
KBS 춘천	온라인	공공의료 어려움 심각...강원도 대책 추궁	7
MBC 강원영동		강원에만 없는 '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보호·근원 연...	8
LOCAL세계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 도정질문	10
ms투데이	온라인	심오섭 도의원, 강원 무형문화재 정책 지적 "지원금 13년째..."	11
LOCAL세계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엄기호 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2
뉴스쉐어		엄기호 강원도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3]	13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전국소방공무원노조 면담	1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양속희 강원도의원,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조 면담 진...	16
연말뉴스		'급식비 지원 전무' 강원 소방관서 수두룩..."처우개선" 약속	17
CBS	온라인	최재민 강원도의원 "원주 봉화산 택지 초등학교 신설 시급"	18
이뉴스투데이	온라인	최재민 강원도의원 "원주 봉화산 택지지구 초교 신설해야"	19
매일일보	온라인	하석균 강원도의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 적극·투명 ...	20
일간투데이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	21
G1방송	온라인	박윤미 도의원 "반도체 산업 육성..미흡"	22
江原日報	10면	춘천 성장 위해 머리 맞댄다	23
江原日報		[포토뉴스] 흥천군 두촌면 자은3리 후동마을 소규모 농촌축...	24
江原日報	21면	[동정]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인제)	24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최상기(왼쪽) 인제군수·엄윤순(인제) 도의원	24
강원도민일보	01면	비대면 진료가 대안? 도내 농촌 한달간 2건	25
강원도민일보	01면	'국제빙상장 최적지 찾아라' 내달 평가돌입	26

강원도민일보	02면	김 지사 "반도체는 늦둥이...강특법 특례로 해법 찾는다"	26
江原日報	01면	공공요금마저 줄인상 ... 서민 허리 휨다	27
江原日報	04면	위험한 등·하굣길 ... 스쿨존 60% 안전펜스 없다	28
강원도민일보	05면	'쇼스가 나타났다' 뜨거워진 동해안 상어 출몰 급증	29
강원도민일보	10면	"국제스케이트장 원주시민 뜻 모아 유치"	2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폐교 활용 주민·지자체 협업 필요	3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 국회의원 발의 법안 협치 기대	31
江原日報	19면	[사설] 1인 가구 지원 정책 미비, 조례 제정부터 서둘러야	32
江原日報	19면	[사설] 불황에 실직자 속출, 발등의 불이 된 경제위기	33

2024 04 24 ()

江原日報

“道 산림엑스포 사후 활용안 마련 시급”⁰²

도의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폐막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용복(국민의힘·고성) 도의회 농업수산업위원장은 23일 제32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가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부채 탕감을 위해 잼버리장 부지를 강원개발공사로 넘기려는 준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엑스포가 열린 세계잼버리수련장 부지는 강원자치도의 재산인데 부지 사용료 등을 위탁된 외부 기관에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도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 스카우트연맹에 손실보전금 10억746만원을 지급했다”며 “굳이 산림엑스포가 열린 2023년까지 재계약을 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해당 지역은 관련법상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만 위탁관리할 수 있다”면서 “재계약이 아닌 공고를 통한 선정이었다”고 답했다. 또 “무상임대가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도록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심오섭(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이 김진태 도지사에게 영동지역 도립 재활병원 설립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김용복 위원장 “6개월 전 제언에도 부지 넘길 준비만 급급” 위탁기관 손실보전금 지급 지적에 道 “재산 관리 목적 위탁”

위탁을 준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강원자치도가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해·삼척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추진이 확정됐다. 전임 최문순 지사부터 기초

를 닦았고 김진태 도정에서 그야말로 꽃을 피웠다”며 “반도체산업에 신경 쓰는 만큼 수소산업에도 관심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반도체는 늦둥이라고 보면 되고 바이오·수소산업은 몇 년째 잘 크고 있는 우량주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이제 열심히 해서 1,500억원 정도 확

보가 됐는데, 수소산업에는 최근 5년간 국·도비 7,100억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심오섭(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전수교육관이 없거나 열악한 무형문화재단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 도의 공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기호(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강원지역 학생들에 대한 소식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해안 해변에 맨발 걷기 길 조성 검토도 주문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24 ()

02

“의료대란 속 강원지역 의료원 적자 도비 지원해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김 지사 “정부 지원정책 따라 검토”

접경지역특별기금 마련 등 촉구

의료대란장기화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적자를 내고 있는 강원도내 의료원에 대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도정질문에 나선 심오섭(강릉) 의원은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대학 병원 분원이 6600병상 신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이 의료 불행이 될 것이다. 이에 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준비한 모든 의료 정책들이 무용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의 적자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의료취약계층 진



심오섭



최재석



김용복



엄기호

료와 관련해 발생한 적자는 경기도의 ‘착한 적자’ 지원 사업처럼 도비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도내 의료원의 취약 계층 진료 관련 적자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해 50억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준비 중이었으나, 정부에서 종합지원정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도의 지원 타이밍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재석(동해)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 사업은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기에 이를 지원할 기구 등이 필요하다”며 “반도체에 쏟는 관심만큼

수소 사업에도 더욱 신경 써 강원 에너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복(고성) 의원은 “어업인이 아닌 이들이 취미로 하는 맨손 해루질로 인해 동해안 어

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이를 방지할 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어민들이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마음껏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해루 금지 조례가 지정될 수 있게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접경지역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 등을 지적하며 “접경지역의 지역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 이를 지원할 접경지역특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폐광지역에 카지노처럼 면세점 설치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호 jeongh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4 24 ()

02



본지 기사 등장한 도정질의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최재석 도의원(동해)이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인용해 질문 하고 있다. 김정호

2024 04 24 ()

에너지경제

강원도의회, 24일 제3차 도정질문 이어가

심오섭 의원, 도 무형문화재 정책·공공의료 정책 대안 제시
 엄기호 의원, 접경지역 발전기금 설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지원방안·농어촌유학 활성화 방안 등 질의



▲심오섭(사회문화위원회, 강릉2)·엄기호(교육위원회, 철원2) 도의원. 사진=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심오섭 도의원(사회문화위원, 강릉2)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의료료원의 필수의료 관련 적자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태고 공개행사비도 부족하다며 도내 무형문화재 지원의 열악함 및 전수교육관이 없거나 열악한 무형문화재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 대학병원 본원이 6600병상 신설로 의료인력 유출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고 의료 취약계층 진료와 관련해 발생한 적자에 대해 경기도의 착한적자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태 지사는 “의료료원 적자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50억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중이라 정부 지원정책 방향에 따라 도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필요성도 공감하고 문화재연구소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엄기호 도의원(교육위원회, 철원2)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엄 의원은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조식 제공 필요성을 지적하고 강원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강원도 학생의 결식률은 42%가량으로 서울·강릉 지역의 사업 결과를 검토해 도교육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대도시 지역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 81명, 경기지역 35명, 인천 14명의 유학생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엄 의원은 '접경지역개발기금' 마련의 필요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인력 부족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농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생활여건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석성근 친환경농정국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각 지역농협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 각종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ess003@ekn.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24 ()

2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 다문화연구회가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연구회 연간활동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도의회

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 ‘다문화연구회’ 간담회

연구용역 과제 선정·활동 방안 논의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다문화연구회(회장 박길선)가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연구회 연간활동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문화연구회는 이날 2024년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연구회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문화연구회장인 박길선(원주) 의원은 “지난해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江原日報

2024 04 24 ()

02

강원도의회 “다문화 친화적 사회 조성 앞장”

다문화연구회 간담회 개최
연간활동 방안 등 함께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다문화연구회가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2024년 연구회 연간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올해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연구회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강원자치도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도내 이주민들에게 실제로 도

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부분인지 구술 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길선(국민의힘·원주) 다문화연구회장은 “지난해 연구회 활동을 통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용역 과제를 고심,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4 04 24 ()

에너지경제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연간활동 방안 논의



▲강원도의회 연구모임 '다문화 연구회'는 23일 연구회 연간 활동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다문화 연구회'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올해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연구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길선 회장(교육위원회, 원주) 연구회 회장은 “작년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구체적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ess003@ekn.kr)

2024 04 23 ()

KBS 춘천

공공의료 어려움 심각...강원도 대책 추궁



[앵커]

오늘(23일) 열린 강원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 감소로 농촌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요.

강원도는 비대면 진료와 의료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년 전부터 1주 진료 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강원도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 270여 명에서 올해 240여 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엄문섭/양구군 동면 : "매일매일 문을 열면 아주 감사하죠.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대환영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꼭 해주나요. 그건 모르죠."]

특히 농촌 지역 고령의 주민들 불편이 큼니다.

강원도 군 지역 11곳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명을 넘는 곳은 홍천군, 영월군뿐입니다.

나머지 9곳은 평균 0.7명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공공 의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오섭/강원도의원 : "주요 도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에 계신 도민께서 체감하는 의사 수는 훨씬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강원도는 비대면과 원격 진료를 확대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희/강원도 복지보건국장 : "비전속 의료인도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원격 진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의료진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의료인 장학제도를 늘리고, 5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파격적으로 총 한 50억 원 정도를 금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잠시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정 질의에서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건립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최혁환

김영준 ykim1@kbs.co.kr

강원에만 없는 '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보호·근원 연구 시급

홍한표

지난 2018년 전북 완주를 끝으로
지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지 못한 곳은
이제 강원과 제주 단 두 곳입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해 보호할 문화유산이 많고
예맥 문화의 근간을 찾기 위한
가칭 '국립 강원문화재연구소' 유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차례의 발굴 조사 끝에
동해시 원삼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소형 석탑인 소탑에 불상, 금동장식 등
69점의 유물을 조금씩 복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유산 발굴과 복원, 돌봄까지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산하 기관이라
일 년 예산이 50억 원 안팎이어서,

3D 아카이빙 작업,
출토된 유물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의 문화유산은
빈번한 재난재해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 대형산불.

화재 당시 혹시나 불이 붙을까
경포대의 현판 7개를 옮겼지만,
불은 사찰 인월사를 완전히 집어 삼켰습니다.

그나마 부분 소실된 방해정은
지정 문화유산이라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포호 주변 정자 상영정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라 별다른 소화 장치가 없어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강원은 부여족의 나라 '예맥'이 근원이지만
아직 뿌리의 정통성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산하기관
지방 연구소를 유치해야 할 이유입니다.

심오섭 / 강원도의원
"자연 재난부터 또 강원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 문화 환경 정비 육성 선도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면
문화 유산 보호는 물론
체계적인 학술조사 연구를 통해
지역 문화권의 실체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 국립문화재연구소 1곳당 예산은
강원문화재연구소의 10배 가량이나 됩니다.

이상균 /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문화재 관리가 학술 연구, 조사, 그리고 보존
이 세 가지 측면이 함께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국립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은데,

일단 관련 시행규칙에는
지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7곳까지만 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원 정치권의 공조로 이를 풀어야 하는데
다행히 이번 총선의 일부 당선인들이
공약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를 넣었습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 등
강원도에는 문화 권역별 특징이 다양한 만큼
조속한 유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흥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2024 04 24 ()

LOCAL세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 도정질문

전경해 기자
 도 무형문화재 정책과 강원문화재연구소 역할 강화
 도 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 적자 지원 등 긍정 답변 이끌어 내



▲도정 질문하는 심오섭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4월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국힘)이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도 의료원의 필수 의료 관련 적자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김진태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심 의원은 13년째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 지원금 동결과 국가 및 타시도에 비해 부족한 공개행사비 등 무형문화재 지원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전수교육관이 없거나 열악한 무형문화재 단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해당 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김진태 도지사에 도정 질문하는 심오섭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공공의료 관련 2028년까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6600병상 신설됨에 따른 의료인력 유출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학제도 등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밖에 공공의료원의 적자 및 임금 체불 문제와 의료취약계층 진료 관련 발생한 적자에 대해 경기도의 '착한 적자' 지원 사업처럼 도비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 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 관련 적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50억 원 도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도의 지원 타이밍을 검토하겠다”며 “문화재연구소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했다.

심 의원은 “의료는 현실이고 문화는 미래다. 우리 도의 의료·문화 정책이 더욱 공고히 정비되어, 도민들의 현실이 행복으로 채워지고 번영하는 미래를 마주할 것”이라고 했다.

로컬(LOCAL)세계 / 전경해 기자(dejavu0057@gmail.com)

2024 04 23 ()

ms투데이

심오섭 도의원, 강원 무형문화재 정책 지적 “지원금 13년째 동결”

한승미 기자

심오섭 도의원 23일 본회의서 집중 질의
강원 무형문화재 지원금 13년째 동결
공개 행사비와 전수교육관 등도 열악해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의 무형문화재 지원 정책 개선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영상회의록)

강원지역의 무형문화재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해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 2)은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가 무형문화재 지원금은 인건비와 물가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해서 증액됐지만 도 지원금은 13년째 동결 상태”라며 “도의 전승지원금 지급 비율을 전국과 비교하면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50%, 보유단체 15~2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의 전승지원금과 비교해도 도의 전승지원금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며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율 전승 보유단체에 대한 추가 운영비 지원과 전수교육관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예능보유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율 전승 보유단체의 경우 국가는 200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형문화재단체 전수교육관이 없고 공개 행사비도 부족한 열악한 상황으로 도 차원의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승기 도 문화체육국장은 “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공개행사비 상황을 검토하겠다”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 타 시도 사례 등을 고려한 지원 확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2024 04 23 ()

LOCAL세계

강원특별자치도 엄기호 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전경해 기자

접경지역 발전기금 설치로 지역 발전 방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지원 방안 마련 및 축산 농가 악취 저감

학생 조식 지원 방안, 농어촌 유학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사업 준비 현황 질의



▲ 도정 질문하는 엄기호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은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조식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12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교육 분야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엄 의원은 대도시 지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과적인 방안과 도교육청이 수도권 지역의 각 지자체와 협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엄 의원은 접경지역 공동화 문제와 관련해 <접경지역 개발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접경지 면세점 등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배정 인원 부족으로 농가의 피해 상황과 이들에 대한 도 차원의 생활여건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통한 관광 콘텐츠 확보 방안과 동해안 해변을 맨발 걷기 길로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철거 결정이 내려진 태릉 빙상장 대체 시설 선정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로컬(LOCAL)세계 / 전경해 기자(dejavu0057@gmail.com)

2024 04 23 ()

엄기호 강원도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으로 학생 조식지원 방안, 농어촌 유학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사업 준비 현황에 대해 질의 벌여

최남우 기자



▲ 엄기호 강원도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뉴스쉐어=최남우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은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4월 23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엄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강원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질문을 통해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2019년 농업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밥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기억·학습능력은 물론이고 신진대사 측면의 지표에서도 결식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조식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강릉지역 학교의 조식제공 사례와 이미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설문 사례를 소개하며 조식제공 필요성과 강원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강원도 학생의 결식율은 42% 가량으로 전국 평균인 41%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 지역의 사례와 기존의 강릉 지역의 사업 경과를 검토해 강원교육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12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대도시 지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이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기존에 밝힌 수도권 지역의 각 지자체와 협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명월 정책국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대도시 지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서울 지역 학생 81명의 유학생을 유치했으나, 경기도 인천의 경우 여주 강화와 같은 각 지역 내 인구소멸 지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촌 유학 제도가 있어 업무협약은 실행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다만, 경기 지역에서 35명 인천에서 14명의 유학생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답변했다.

엄기호 의원은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적용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책 중심의 교과서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제공을 비롯해 학생과 교원 간에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교실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 적용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임의원은 이어서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교수 학습 과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자칠판의 역할을 질문하고 교육청이 조사한 전자칠판의 수요와 공급량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과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홍명표 도교육청 미래학력담당관은 2025년 시범 운영을 거쳐 강원도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전자칠판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특히 교수법에 있어 각종 자료 영상 등의 활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자칠판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공동화 문제와 관련해 군부대 이전 등의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접경지역 특위를 구성해 접경지역 특별회계를 통한 지역 사업 계획은 높게 평가할 일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기금 마련을 벤치마킹해 접경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접경지역 개발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접경지 면세점과 같은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활성화에 지원할 의지가 없는지 질문했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에 면세점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말하고, 다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원자치도 외 접경지 타지역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임기호 의원은 농업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자 수가 법무부 배정인원에 비해 큰 차이로 부족한 이유와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역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생활 여건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석성균 친환경농정국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올해부터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각 지역 농협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의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호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공동발의 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강원자치도에서 조성하는 걷는 길의 정의에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을 추가로 규정한 것을 상기시키며 전 지역이 관광지인 강원자치도에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통해 관광 콘텐츠 확보 방안에 나설 의향이 없는지 질문했다.

임의원은 특히, 강원자치도 동해안의 경우 해변 모래를 통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경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다.

현준태 관광국장은 맨발 걷기 길을 포함한 걷는 길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특히 맨발 걷기 길이 강원도 관광의 특화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철거 결정이 내려진 태릉 빙상장 대체 시설 선정에 전국의 7개 기초 지자체가 응모했는데 이중 강원자치도의 3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江原日報

2024 04 24 ()

21



도의회 전국소방공무원노조 면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부의장, 양숙희·강정호 도의원이 23일 도의회에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임원들과 만나 연중 상시대기와 불시출동 등 특수 근무환경에 적합한 급식 환경 개선 등을 면담했다.

2024 04 23 ()

강원도민일보

양숙희 강원도의원,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 노조 면담 진행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은 23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기홍 부의장, 강정호 의원과 함께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춘천) 의원은 23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기홍(원주) 부의장, 강정호(속초) 의원과 함께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특수 근무환경(연중 상시대기 및 불시 출동 등)에 적합한 급식체계가 필요하다"며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급식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강원지역 소방관서 77곳 중 급식운영 예산 미지원 관서는 46곳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미지원관서가 5개 이상인 곳은 강원도 유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청한 미지원관서 46개 급식운영 예산 9억8000만원을 전면 삭감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타 시도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소방공무원 복지개선, 사기 증진을 위한 필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부의장과 양숙희 의원은 "일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4200여만원의 예산으로 4개 관서에 대한 급식운영 예산을 우선 반영해 향후 위탁운영 예산의 증액 및 직접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원 충원 등 급식환경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중 새내기도약휴가(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설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 특별휴가 상향 필요(30일 이상)도 함께 요청했다.

'급식비 지원 전무' 강원 소방관서 수두룩... "처우개선" 약속

강원도의회, 한국노총 소방노조 임원들과 면담



강원도의회, 한국노총 소방노조 임원들과 면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임원들과 면담했다.

홍순탁 소방노조위원장은 연중 상시 대기과 불시출동 등 특수 근무 환경에 적합한 급식체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급식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또 현재 강원지역 소방관서 77곳 중 급식 운영 예산 미지원 관서가 46개에 이르는 점을 들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소방공무원 복지개선, 사기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기홍 부의장과 양숙희.강정호 의원은 "일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4개 관서에 대한 급식 운영 예산 4천200여만원을 반영하고, 앞으로 위탁운영 예산 증액과 직접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원 증원 등 급식환경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는 2024년 당초 예산에 급식 운영 예산 미지원 관서 46곳에 대한 예산 9억8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급식 운영 예산 미지원 관서가 5곳 이상인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conanys@yna.co.kr

2024 04 23 ()

CBS

최재민 강원도의원 "원주 봉화산 택지 초등학교 신설 시급"

강원CBS 박정민 기자



최재민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 원주시 봉화산 택지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에서 나왔다.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22일 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생들은 최대 2.1 km 떨어진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어린이 평균 도보 속도로 계산하면 최대 55분 걸리는 거리"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택지 지구의 학생들이 평원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최대 7개의 횡단보도, 1택지 지구의 학생들은 3~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여야 한다"며 통학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단기 대책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택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04 23 ()

이뉴스투데이

최재민 강원도의원 "원주 봉화산 택지지구 초교 신설해야"

김경석 기자

평원초까지 최대 2.1km...평균 도보 55분 걸려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4)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경호 교육감에게 원주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4)은 지난 22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경호 교육감에게 원주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생들은 최대 2.1km 떨어진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어린이 평균 도보 속도로 계산하면 최대 55분 걸리는 거리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택지 지구의 학생들이 평원초까지 가려면 최대 7개 횡단보도, 1택지 지구의 학생들은 3~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보다 나은 등하교가 가능하도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택지 내 초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석 기자 ks191212@naver.com

2024 04 23 ()

매일일보

하석균 강원도의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 적극·투명 행정 촉구

황경근 기자

전임 도정 당시 추진 됐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적극·투명 행정 당부
원주 드림 랜드 부지 관련 지방정원 사업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 촉구



하석균 의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하석균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문 주요 주제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원주 드림 랜드 부지 활용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이다.

하석균 의원(사진)은 도정질문에서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임 도정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에게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강원도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요청 드린다. 특별히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후속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도민들이 현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라며 현 도정에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도민들을 위한 힐링명소를 구축하기 위해 원주시가 구 드림 랜드 부지 전체를 지방정원 사업으로 추진하되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길 촉구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일간투데이

2024 04 24 ()

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 등 집중 거론

전임 도정 당시 추진 됐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적극·투명 행정 당부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주요 주제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원주 드림랜드 부지 활용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이다.

하석균 의원(사진)은 도정질문에서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임 도정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



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에게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강원도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요청 드린다. 특별히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후속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도민들이 현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며 현 도정에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도민들을 위한 힐링명소를 구축하기 위해 원주시가 구 드림랜드 부지 전체를 지방정원 사업으로 추진하되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을 설치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길 촉구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2024 04 23 ()

G1방송

박윤미 도의원 "반도체 산업 육성..미흡"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가 어제(22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도정과 교육행정 등을 질의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박윤미 도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 유치 대상 기업 천 46곳 중 현재까지 업무협약이 이뤄진 기업은 3곳뿐"이라며,

"이 기간 431회의 출장을 다니면서 겨우 3곳만 업무 협약했다는 것은 미흡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엄기호 도의원이 학생 조식 제공과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등 학생 건강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 성장 위해 머리 맞댄다

내일 인구 전략 포럼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2024 춘천의 성장과 인구 전략 포럼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AMP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 강원일보, 강원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대도시 특례 조건인 인구 30만 명 달성을 위한 춘천시의 인구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춘천시 주민등록인구는 올 3월 말 기준 29만1,218 명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확대 등 단기 인구 유인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 기업 혁신파크 유치 등 중·장기 인구 증가 동력을 확보하며 인구 30만명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로컬 브랜딩과 콘텐츠 타운'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또 조명호 강원연구원 박사가 '춘천시 지역성장과 인구 소멸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가 좌장을 맡고 경창현 시 자치행정과장, 임미선 도의원, 박인옥 강원대 교수,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 감소지역대응센터장이 각각 패널로 참석한다.

춘천=정윤호기자

2024 04 23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홍천군 두촌면 자은3리 후동마을 소규모 농촌축제 개최



홍천군 두촌면 자은3리(이장:이상필) 후동마을은 20일 신영재 홍천군수, 홍성기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출향민을 초청해 '고향의 봄'을 주제로 소규모 농촌축제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24 ()

江原日報

2024 04 24 ()

21

◇엄윤순도의회농림수산부



위원장(인제)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2회 접

경지역 4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 이장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13

수·엄윤순(인제) 도의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양구청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2회 4개군 이장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최상기(왼쪽) 인제군

2024 04 24 ()

강원도민일보

01

비대면 진료가 대안?

도내 농촌 한달간 2건

물꼬 튼 재택의료, 아직 먼 길

정부, 공보의 빈자리 대책 마련
도 시행 20여일 불구 이용 저조
스마트기기 미숙 고령층 대부분
활용 높은 원격협진 15곳 불과

정부가 시·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이 빠진 자리에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결국 탁상행정애 그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3월 시작된 의료계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화상 전화' 등 비대면 진료로 메워보려는 취지다. 도내에서는 23일 현재 공보의 248명 가운데 30명 이상 급중합병원으로 파견된 가운데, 시·군 보건지소 23곳은 의과 공보의가 없다.

지침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됐지만,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시행 20여일이 지난 현재 도내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18개 보건소, 98개 보건지소

를 통틀어 단 2건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스마트 기기 이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 많은 점이 꼽힌다. 시·군 보건지소는 고혈압·당뇨·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주기적으로 약 처방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의 방문이 많다. 양창모 호방문진료센터장은 "비대면 진료는 키오스크(무인계산기) 앞에 어르신들 세워놓는 것과 똑같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전화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기기를 이용해서 혈압을 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보조인이 있는 '원격협진'은 활용도가 있는 편이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방문한 환자는 공보의가 없어도 의료인 보조 하에 화상으로 공보의·민간 병의원의사에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도내 245곳의 원격협진 건수는 4894건이다. 다만, 원격협진에 응하는 민간 병의원이 현재 도내 15곳에 불과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원도 보건행정팀 관계자는 "시골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며 "보조인이 있는 원격협진으로 공보의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설화 lofi@kado.net

2024 04 24 ()

강원도민일보

'국제빙상장 최적지 찾아라' 내달 평가돌입

춘천·원주·철원 등 전국 7곳 대상
 속도=대한체육회가 춘천·원주·철원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만나 태릉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의 대체 빙상장 건립지 유치에 대해 논의(본지 3월 19일자 17면)한 결과를 토대로 5월 중 본격적인 평가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3일 대한체육회 시설건립추진단은 철거를 앞둔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

스케이팅장의 대체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다음달 중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평가 기준, 항목, 실사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육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팅장 대체지 유치 신청을 받았다. 현재 춘천·원주·철원을 포함해 경기 양주·동두천·김포,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3월 7

곳 지자체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학부모, 일반인들의 시설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체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국제스케이팅장은 400m 규격의 훈련 복합시설로 건립돼 2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과열된 양상이다. 춘천시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원팀'을 결성해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고 원주는 이날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철원도 지역사회에서 릴레이 응원 등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호석

01

2024 04 24 ()

강원도민일보

김 지사 "반도체는 늦둥이...강특별 특례로 해법 찾는다"

02

도 반도체 과도 집중 우려 불식
 강원형 인재 1만명 양성 발판
 수질오염총량제 등 규제 해소
 부지·용수 확보 해결방안 모색



과를 신선했던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토대로 도는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권역별 공동 연구소 공모사업에 제도전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원형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이 될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는 2026년 건립이 목표다. 특히 인재양성 협업 등 삼성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원형반도체 산업이 부지와 용수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특례안 적용과 반도체 인재양성을 발판으로 한 단계적 해법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김진태(사진) 도지사는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23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반도체는 늦둥이"라며 "바이오, 수소는 몇 십년째 돼서 잘 크고 있는 우량주"라고 강조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불모지인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강원형반도체 산업 추진에 있어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반도체산업 육성 4대 전략(인력양성·테스트베드 구축·부지조성·기업유치)을 중심으로 강원형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반도체 교육센터와 3대 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4대 거점 국비사업 확보, 반도체 기업 3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토양을 다지고 있다.

'메이드인강원' 반도체 전문 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고반도체학

강원형반도체 산업과 관련, 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향후 강원특별법개정을 통한 특례안 적용이다. 도가 지난 2월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118곳, 설계 기업 11곳, 반도체학회·협회 12곳)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강원 지역 투자 동기에 대해 응답자의 36%가 강원특별법의 규제 특례를 택하며 1순위로 꼽았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선오염부하량 확대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도는 특정물질 배출제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용수 관련 규제해소 방안을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풀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부지와 용수, 전력 등의 기초 인프라 확충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부지면적(부론 국가산단)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부장 기업 유치가 있어 해당 부지는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화천담용수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선 "화천담이 발전용수에서 산업용수로 변경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강원형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시 도차원의 전면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심예섭

江原日報

2024 04 24 ()

01

공공요금마저 줄인상 ... 서민 허리 휜다

물가 고공행진 속 억눌러온 가스·수도로 들쭉

식료품, 공산품, 기름값 등 물가고 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요금마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년간 동결됐던 가스요금은 공급비 조정을 앞두고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고, 각 시·군도 속속 수도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원도 내 서민경제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 가스요금 인상 초읽기=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2022년 세 차례 인상됐고, 지난해 5월 추가 인상된 이후 1년째

동결 상태다. 지난해 초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억제한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동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에너지 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2023년 말 기준 13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무시할 수 없다. 미수금은 공사가 가스를 수입해 온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액을 의미한다.

여기에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원료비 부담도

1년째 동결 중인 도시가스로

내달 공급비 조정 가능성 높아

내달 각 지자체 상하수도요금

이미 올렸거나 하반기부터 '↑'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의 원료비는 짝수달마다 정산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며,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마다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인상 여부와 단행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10%가량 인상한다'는 예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며 일단 선을 그었다.

■ 상하수도요금도 올라=상하수도요금 또한 인상되며 서민경제를 압박하게 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달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톤당 가정용 70~290원, 일반용 180~510원, 대중탕용 170~230원 인상했다. 전용공업용은 상수 120원, 하수 160원을 각각 올렸다.

양양군은 2025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톤당 610원에서 710원으로, 하수도요금을 265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강릉은 올 7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7%, 10% 이내 수준으로 올린다. 태백시와 양구군 역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하반기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전기요금은 동결 가능성 유력=반면 전기요금은 또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냉방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난해 초 불거진 '난방비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은 올 4분기 인상이 재개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이기자·지방종합

江原日報

2024 04 24 ()

04

위험한 등·하굣길 ... 스쿨존 60% 안전펜스 없다

초교 앞 방호 울타리 없는 인도에 '개구리 주차' 등 보행자 위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도 26% 그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15건

강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4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지역도 어린이집·유치원 스쿨존이 초등학교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23일 오후 3시 춘천 효자동의 A초등학교 앞 스쿨존.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인도에 차량 2대가 올라와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인도가 없는 구간도 있었다. 교동의 B초등학교 스쿨존은 250m 구간 중 절반만 방호 울타리가 없었고 노란색 횡단보도도 없었다. 강릉 교동의 C초등학교는 노면에 스쿨존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시가 아예 없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스쿨존을 인지하는 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도내에서 도입이 완료된 스쿨존은 30%에도 못 미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754곳 중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 곳은 198곳(26%) 정도다. 방호 울타리의 경우 600곳에 설치돼

있지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다. 도내 스쿨존 전체 구간 243km 중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구간은 40% 정도다.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 154곳 중 73%는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이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친 교통사고는 총 15건으로 대부분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스쿨존 안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올해 강원지역 스쿨존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줄었다. 각 시·군의 사업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울 송파구 스쿨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스쿨존 전수 조사가 나선다. 보행로, 방호 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과속 위험이 큰 왕복 4차로 구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곡선 구간 등에 방호 울타리 등 안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쇼스가 나타났다’ 뜨거워진 동해안 상어 출몰 급증

속초서 3m급 청상아리 혼획
지난해 고성~포항 29건 신고
전문가 “연안 안전지대 아냐”

여름관광 1번지 강원 동해안 연안에서
올해 첫 식인상어가 발견되면서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쯤 속초시 장사항 동방 약 1.4km
(0.8해리) 해상에서 청상아리 상어가
혼획됐다.

혼획된 청상아리는 길이 295cm, 둘
레 130cm, 무게 160kg으로 작살 등 불
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올들어 고성~삼척 연안에서 상어가

혼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최근 2
년 사이에 동해 연안에서 포악 상어류
가 급증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강원 고성~경북 포항까
지 동해안에서 우연히 잡히거나 발견
된 대형 상어류 신고 건수가 총 29건으
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2년 신고 건
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신
고건수중 청상아리 6건, 백상아리 2건
등 총 14건의 상어는 공격성과 날카로
운 이빨을 갖고 있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포악상어류’로 분류된다.

이번에 잡힌 강원도 1건을 비롯해서
남달 경북 1건 등 총 2건이 신고되는 등
더 이상 동해안 ‘상어 안전지대’가 아
닌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동해안에서 잇따른 상어 출몰에 대

해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을 가장 중요
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고등어, 전갱
이, 삼치, 방어 등 해수면 가까이 서식
하는 표층성 부어류가 동해로 많이 울
라오고 있는데 상어가 이들을 쫓으면
서 동해 연안까지 올라 오고 있다는 분
석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이
선길 해양수산연구관은 “상어는 동·
서·남해를 가리지 않고 분포하고 있지
만 최근 동해안 연안에서 잇따라 출몰
하는 것은 먹이가 다량 동해로 유입됐
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연구소도 울
해부터 추가적인 생태 정보 조사를 통
해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
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지난 22일 속초시 장사항 동방 약 1.4km(0.8해리) 해상에서 청상아리 상어가 혼획됐다. 혼획된 청상아리는 길이 약 295cm, 둘레 약 130cm, 무게 약 160kg으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7만 원에 위판됐다.

사진 제공-속초해경

강원도민일보

“국제스케이트장 원주시민 뜻 모아 유치”

범시민추진단 출정식 활동 돌입
140개 사회단체·정치권 모여
교통·의료인프라 강점 등 피력

원주 각급 기관 및 단체, 정치권이 국
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한 목소리
로 염원했다.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이 23일 동부북합체육센터에
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
다. 추진단은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
의장, 주영일 교육장 등 8개 단체로 공
동의장단을 꾸렸으며, 도·시의원으
로 대의원을 구성했다. 여기에 140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원주의 140개 시민단체가 23일 동부북합체육센터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범
시민 추진단 출정식을 갖고 ‘원주시민 뜻을 모아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자’라고
외치고 있다.

추진단은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가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추진단을 통해 국제스케이

트장 유치 경과를 소개받고 구호인
‘국제 스케이트장을 원주에 유치하
자’, ‘원주시민 뜻을 모아 국제스케이
트장을 유치하자’를 연이어 외치는
퍼포먼스로 원주 유치 의지를 다졌

다. 앞서 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원주 유치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김정윤 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결
의문을 통해 “원주는 편리한 교통, 의
료인프라, 학생 선수들을 위한 교육
여건 등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
는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며 “모든 역
량을 총동원해 국제스케이트장을 유
치, 대한민국 방상스포츠의 백년대계
를 원주에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의 빙상 스포
츠 자산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
제스케이트장은 반드시 원주에 유치
돼야 한다”며 “단합된 시민의 힘으로
원주의 미래를 다시 쓸 기회를 움켜
쥐자”라고 피력했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2024 04 24 ()

/ 19

폐교 활용 주민·지자체 협업 필요

-도교육청 전권 역부족, 특별자치도법 개정 공동 권한을

학령인구감소로 해마다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나, 그 지역과 마을에 요긴한 기능과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도내에 폐교가 발생하기 시작한 1981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482개교입니다. 이미 281개소는 매각 및 부지 교환 혹은 반환 등을 통한 소유권 변동으로 도교육청 재산에서 이탈했으며, 소속 폐교는 201곳인데 미활용이 61개소에 이릅니다. 그나마 활용 중인 140곳도 대다수 외부 임대 방식이어서 지역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외부에 임대된 폐교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하는 115곳입니다. 임대측 사용 목적에 따라 과거의 학교는 농산물 생산 내지 가공 시설, 야영장 등 제각기 쓰입니다.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25곳에 그칩니다. 학생야영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차고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마을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유지와 주민 단합과 문화교류의 중추 기능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40여 년의 시간은 무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작년에 폐교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33개 폐교는 매각

대신 자체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시설별 세부 활용 비전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 중인 곳을 포함해 각지에 흩어진 201개소를 도교육청 전권으로 지역 사정 및 교육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활용을 꾀하는 것은 전담 인력 미흡 및 전문성 측면에서 역부족입니다.

폐교 부지 및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폐교 이전 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내놓고 폐교 시점과 동시에 변모 사업 추진에 들어가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폐교 후에 활용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적기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로 매각과 임대로 이어지고 폐교 이용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월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회차에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택했습니다.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부담하는 만큼 폐교 시설에 대한 공동 재산권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폐교 문제가 도내에 국한하지는 않으나, 강원은 고도의 자치분권을 강화한 특별자치도법을 이용해 도교육청, 지자체, 주민 세 주체 간에 협업을 통해 폐교 활용에 더 성과를 내는 길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24 ()

/ 19

도 국회의원 발의 법안 협치 기대

-현안·경제 회생 목표 여야 초월 지원 필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도 출신 의원들이 개원 후 발의할 '제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8명의 지역구 의원 모두 21대 국회에서 활동해, 의정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법안들은 정파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의 협력 없이 조기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별 법안에 대한 도 국회의원 간 상호 지지와 지원이 뒤따른다면, 더욱 수월하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국회의원이 내놓을 안들은, 지역의 당면 과제와 연결돼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도내 접경지역 내에 민간 군사 기업을 유치 등을 목적으로한 '민간 군사 기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주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가칭 '지역인재 육성법'과 강원형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놓고 1호 법안을 고민 중입니다. 송기현(원주 을) 의원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인을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도내 '초대형 공공 선거구' 출현 방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삼척 도계지역 내면세점 설치 규정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설악권 내 군사지역, 절대농지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할 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계절근로자 제도 개정을 골자로 한 '농어업 고용인력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구의 경제 성장을 위한 맞춤형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강원 발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도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에서부터 정책 실현에 이르기까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4 24 ()

/ 19

1인 가구 지원 정책 미비, 조례 제정부터 서둘러야

강원지역 1인 가구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도내 지자체 중 속초시 한 곳뿐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2020년만 해도 23만1,000가구였지만 올해는 34만6,514가구로 4년 만에 50%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시·군도 8곳이나 된다. 하지만 올 3월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속초시 1곳이다. 1인 가구 급증에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 경제적인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다. 싱글이나 독신, 혼자 살아계신 노부모 가구 등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저소득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세부 정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급한 일이다.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갖추

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 인구 및 복지 정책이 결혼해 자녀를 낳은 부부 위주로 설계돼 있다 보니 1인 세대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조례 제정에 도내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혼자 사는 청년보다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고령화로 홀몸노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중이다. 1인 세대가 주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 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된다.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연령별로 1인 가구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개발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1인 가구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나 홀로 가구에 대한 대책 없이 '청년 저출산'과 '노인 고독사' 문제는 결코 풀 수 없다.

江原日報

2024 04 24 () / 19

불황에 실직자 속출, 발등의 불이 된 경제위기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속에 대량 실업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올 2월 지급된 실업급여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1년보다 많은 352억여원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강원자치도 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352억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5억6,496만원보다 26억3,518만원(8.09%) 늘었다.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된 2019년 10월 이후 2월 기준 최다액수다. 특히 코로나19 발(發) 고용 쇼크로 실업자가 양산됐던 2021년 2월(351억6,811만원)보다도 1억3,200만원이 많았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일을 그만둔 실직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2월 강원지역 실업자 수는 3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800명보다 2,800명(9.72%)이나 급증했다. 강달러 현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이다. 고물가 추세도 심상치 않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국제 유가도 치솟아 3고 현상이 뉴노멀로 굳어질 거리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여야

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 당국과 뜻을 모아 신(新) 3고의 위기를 헤쳐 가야 한다. 어느 한쪽만의 밀어붙이기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

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3고가 장기화되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경제 운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올 상반기에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낙후지역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고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2월 강원지역 실업자 수 3만1,60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0명 증가
낙후지역 투자 늘리고 각종 규제 완화해야